

8월 금통위

백투백 이후, 한 번과 두 번 사이

Monetary Policy

[채권] 김명실 2122-9206 msbond@ifnsec.com

Check Point

8월 금통위 결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5bp 인상했으며, 황건일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대폭 상향. 수출 호조가 내수와 수요 측 물가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기본이며 두 차례 인상 가능성도 유효. 3.75% 전망이 없다는
점은 시장의 최악의 매파적 우려를 낮췄지만, 10월 동결 이후에도 인상 경계감은 유지될 전망
성장과 근원물가가 한은 전망에 부합하면 27년 기준 3.50%까지의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판단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와 국내 기관의 대기 매수로 3~5년물이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추가 인상 위험이
금리 하단을 제한할 전망
10년 이상 장기물은 미국 장기금리와 27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영향이 더 큰 만큼, 3~5년 중심의 제한적
듀레이션 확대가 적절

추가 인상 방향은 유지하되, 7~8월과 같은 연속 인상보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25bp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구조적인 물가압력,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불안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결과다. 다만 지난 7월 만장일치 인상과 달리 황건일 위원이 2.75%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만장일치였던 7월보다
위원회 내부의 속도 조절 필요성이 커졌음이 확인되었다. 결정문과 조건부 금리전망을 종합하면 정책 방향은 분명히 추가 인상
쪽이다. 다만 9~10월 연속 인상보다는 성장·근원물가·주택·가계대출을 확인한 뒤 11월 또는 27년 초에 추가 인상하는 경로가
기본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26년 성장률 전망이 기존 2.6%에서 3.3%, 27년 성장률은 기존 2.1%에서 2.9%로 모두
큰 폭 상향조정 됐다. 2분기 GDP가 전기비 0.6%로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돈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 교역조건 개선, 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이러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소비와 내수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년 전망에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뿐 아니라 내년 성장률까지 높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인상이 일시적인 물가·환율 대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과 수요압력에 대응하는 정상화 과정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을 각각 2.7%, 2.3%로 유지한 반면, 근원물가는 올해 2.5%, 내년 2.5%로 상향하였다. 특히 내년 근원물가 전망을 2.3%에서
2.5%로 올린 점은 다소 매파적 행보로 판단된다. 헤드라인 물가가 유가와 환율 안정으로 둔화되더라도 서비스가격, 내구재가격,
임금 및 소비 회복에 따른 구조적 물가 압력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이번 결정문은 '비용 충격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논리에서 '강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수요 측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금리를 올린다'는 논리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핵심은 추가 인상 방향은 유지하되, 7~8월과 같은 연속 인상보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통방문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문구를 구체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 점은 단기적으로 국고채에
우호적일 수 있다. 시장이 우려한 것은 백투백 이후에도 연속 인상이 이어지거나 최종금리가 3.75%까지 높아지는 경로였는데,
총재가 점진적 인상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위험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1. 7월 vs 8월 통화정책방향 변화(요약본)

구분	7월 금통위	8월 금통위	해석
기준금리	2.50→2.75%	2.75→3.00%	백투백 인상
표결	7명 만장일치 인상	인상 6명, 동결 1명	긴축 방향은 유지되나 속도 조절 의견 등장
성장 평가	수출·투자 중심으로 성장세 강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	성장 기반이 수출에서 내수로 확산
성장 전망	올해 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올해 3.3%, 내년 2.9%	올해 +0.7%p, 내년 +0.8%p 대폭 상향
물가 판단	비용·환율 및 수요압력으로 높은 수준 지속	비용 전이와 수요압력으로 상당기간 목표 상회	유가·환율 부담은 완화됐지만 수요 측 압력은 강화
소비자물가 전망	올해 2.7% 부근	올해 2.7%, 내년 2.3% 유지	헤드라인 전망은 상향하지 않음
근원물가 전망	올해 2.4%보다 높은 가능성	올해 2.5%, 내년 2.5%	내년 근원물가 전망이 2.3→2.5%로 상향
환율	1,500원대 중반까지 상승 후 1,400원대 후반	달러 약세·외환수급 개선으로 큰 폭 하락	환율발 인상 필요성은 약화
주택·가계대출	주택가격 오름세 확대, 가계대출 큰 폭 증가	주택가격 높은 오름세 지속, 가계대출 상당폭 증가	금융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음
향후 정책 문구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	추가 인상은 유효하나 기계적인 연속 인상은 아님

조건부 금리전망: 한 번은 기본, 두 번도 동결보다 우세

8월 조건부 금리전망은 6개월 후 기준금리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3.50%가 6개, 현 수준인 3.00%가 5개로 뒤를 이었다. 분포상 기본 시나리오는 향후 한 차례 추가 인상이지만,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추가 인상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만큼 10월에는 그간의 긴축 효과를 점검하며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건부 전망의 약 76%가 3.25% 이상에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11월 인상 경계감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 성장률을 2.9%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 근원물가 전망도 2.5%로 높였다는 점은 인상 필요성이 올해 안에 종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건부 금리전망의 핵심은 ‘추가 인상 여부’보다 ‘한 차례에서 끝날지, 내년까지 두 차례가 이어질지’에 있다. 3.75% 전망이 없었다는 점은 최악의 매파 위험을 제한하지만, 3.50% 점이 3.00% 점보다 많다는 사실은 시장이 내년 초까지의 인상 위험을 계속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표2. 점도표: 6개월 후 기준금리 분석: 중심은 3.25%, 상단은 3.50%

6개월 후 기준금리	점 개수	비중
3.00%	5개	23.80%
3.25%	10개	47.60%
3.50%	6개	28.60%

자료: 한국은행, IM 증권 리서치본부

표3. 8월 인상의 비용 vs. 10월 연기의 비용: 8월 인상의 배경은 연속인상의 비용보다 10월로 연기했을 때 향후 치뤄야 할 비용이 크다는 판단이었음(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겠다). 취약차주 이자부담 등은 금중대 금리 동결 등으로 대응

8월 인상의 비용	10월 연기의 비용
소비심리 추가 둔화	기대인플레이션 고착
취약차주 이자 부담	8~9월 물가 상승 방지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주택·주식 레버리지 확대
일부 내수업종 부담	7월 인상의 신뢰성 약화
성장률 소폭 하락	향후 더 큰 폭의 인상 필요성

자료: IM 증권 리서치본부

채권시장 전망: 솟커버는 가능하지만 장기물 추세 강세는 아직

이번 금통위는 경제전망 측면에서는 매파적이지만, 정책경로는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조합보다 완화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백투백 인상과 올해·내년 성장률의 대폭 상향, 내년 근원물가 전망 상향은 추가 긴축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반면 동결 소수의견 1명이 등장했고 조건부 금리전망에 3.75%가 없었다는 점은 정책금리 상단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재료다. 다만 기본 경로는 한 차례 추가 인상이지만, 두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동결보다 높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인상 사이클 종료나 피벗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 10월에는 백투백 인상의 효과를 확인하며 쉬어갈 수 있지만, 11월 3.25% 인상 경계감은 유지될 전망이다. 성장과 근원물가가 한은 전망에 부합한다면 27년 3.50%까지의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시장은 기준금리 3.25%를 기본값으로 반영하면서도 3.50% 가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지해야 한다. 금통위 직후 불확실성 해소로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11월과 내년 1분기 인상 위험 때문에 추세적인 금리 하락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금통위 이전 시장이 최종금리 3.75%까지 우려했다는 점에서는 솟 포지션을 되돌릴 근거가 충분하다. 3.75% 점이 없었고 동결 소수의견도 확인된 만큼, 총재가 연속적인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지 않는다면 3~5년물을 중심으로 솟커버와 국내 기관의 대기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특히 5년물은 3년물보다 11월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민감도가 낮고 캐리와 롤다운이 유리해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금리는 금통위보다 미국 장기금리와 국내 재정·발행 부담에 더 민감하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국제유가 반등 위험이 남아 있어 국내 10년물의 하락 폭도 제한될 전망이다. 30년물 역시 9월 발행 감액은 우호적이지만 보험사 수요 약화와 27년 국고채 순증 규모를 확인해야 하므로 추세적인 강세를 기대하기 이르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이탈을 국내 은행·보험·기금·운용사가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 상단을 제한한다. 이벤트 통과 이후 9월 발행 감액까지 확인되면 3~5년물의 저가매수가 강화될 수 있다. 다만 내년도 국고채 순증이 100조원을 넘거나 총발행이 220조원 이상으로 제시되면 단기물 강세와 장기물 약세가 병존하며 커브가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통위는 성장은 강하고 추가 인상도 필요하지만 백투백 인상 이후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 단기적으로는 3.75% 위험 제거와 국내 기관의 대기 매수에 따른 3~5년물 강세가 가능하다. 3~5년 중심의 제한적인 듀레이션 확대가 적절하며, 3년 금리가 밴드(3년 밴드: 3.65~3.90%) 하단에 접근하면 추격매수보다 5년 캐리·롤다운 전략이 유리하다. 10년 이상 장기물은(10년 밴드: 4.10~4.40%) 미국채 금리와 27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인한 뒤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10년 스프레드는 35~55bp를 전망하며, 단기물 강세가 먼저 나타날 경우 확대 가능하며 이후 미국 금리 안정과 외국인 매수 회복 시 축소될 전망이다. 10/30년 스프레드는 20~35bp를 전망하며 30년 발행 감액은 축소 재료이나 보험사 수요 회복 전까지 빠른 축소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7월 vs 8월 통화정책방향 변화(상세본)

구분	26.7월 통화정책결정문	26.8월 통화정책결정문	비고
금리결정	기준금리 2.75%로 25bp 인상 결정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결정	동결 소수의견 1명(황건일 위원)
세계경제	건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 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오름세 미국/이란 중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등에 영향받을 것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금리 상승, 미 달러화 약세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AI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등에 영향받을 것	-
국내경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 지속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성장세 확대 향후에도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 확대 올해 성장률 기준 5월 전망치 2.6%를 큰 폭 상회할 것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 지속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 올해 성장률 기준 2.6%에서 3.3%로 상향 내년 성장률 기준 2.1%에서 2.9%로 상향	성장 기반이 수출에서 내수로 확산 올해 +0.7%p, 내년 +0.8%p 대폭 상향

물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 유지 올해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 2.7%에 대체로 부합하나 근원물가는 5월 전망 2.4% 상회 예상	그간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소득 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세 지속 올해 및 내년 헤드라인 물가 각각 2.7%, 2.3% 유지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2.4%에서 2.5%로 상향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2.3%에서 2.5%로 상향	유가 환율 부담은 완화됐지만 수요 측 압력은 강화
금융시장	주요 가격 변수 변동성 확대 특히 환율이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대 중반까지 높아졌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 수도권 주택가격의 흐름세는 확대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완화 등으로 외화수급 개선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큰 폭 하락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흐름세를 지속하였으며, 가계대출도 상당폭 증가	환율발 인상 필요성은 약화 금융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음
정책운용	물가는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흐름세 보일 것으로 전망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에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고,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	7월에는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 8월에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	추가 인상은 유효하나 기계적인 연속 인상은 아님

자료: 한국은행, IM 증권 리서치본부

표2. 26.8월 금통위 기자회견답변 주요 질문/답변

주요 기자 질문	신현승 한은 총재 답변
금리 결정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물가 흐름세 확산하기 전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일정한 폭의 금리인상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효과를 얻겠다는 것 조기 대응이 성장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음 늦게 대응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 소수의견 1인(인상에 대해 동결, 황건일, 3년 7개월만) 존재하나 전반적인 공감 안에서의 전술적인 차이 점도표를 보면 중간치가 3.25%라 지금보다 높음. 앞으로의 6개월의 시계를 두고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의 통화정책 기조는 점도표에 함축되어있음 6개월 시계에서는 금리의 완만한 인상을 예상. 두 번 연속 인상세에 대한 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선제 대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음 앞으로 있을 회의는 Live(경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것) 두 번 연속 인상은 다소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 이를 통해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의미 기준금리가 3%로 갔을 때의 여파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원들 간 공감대 형성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식은 양방향 소통방식임. 시장가격이나 경제를 보고 중앙은행이 얻는 정보도 중요 취약차주에 대한 문제는 긴밀히 논의. 정부의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 정부와 논의할 것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대해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는 동결 소득여건이라는 것은 국민 경제의 소득 여건임. 2분기 GDI+15.6% 성장. 유례없는 수치. 정부 세수 또한 소득 개선의 혜택을 받고 있음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미 명목GDP가 GDI 성장률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 명목 GDP가 큰 폭 성장하면 부채비율 등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재정지출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상관성이 변화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이 된다면 잠재성장률을 올리면서 반드시 통화정책과 엮박자가 아닐 수도 있음 앞으로 나올 재정정책의 규모나 용도, 지출 속도를 보고 판단할 것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비 중. 곧 추가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GDP 갭을 봤을 때 내년이 가야 (+)로 전환된다고 봤지만 현재 시기에서는 훨씬 앞당겨질 것임. 현재 또한 일부 지표들 보면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흐름세에 대한 판단 소득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물가 흐름세 폭이 광범위해지고 장기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우려했음 근원물가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의 기초적인 수요압력을 봐야 하는데 이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근원물가이기 때문 근원물가도 5월 전망에 비해서 상향 조정(26년 2.5%, 27년 2.5%) 수입물가 상승률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경기	
물가	

금융 안정

통화정책이 한 발 늦으면 환율에 대응하기 힘들. 시장이 그만큼 반응을 부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의 경우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1,370원 후반). 선제적 대응이 환율에 대해서도 효과를 주었을 것
환율은 예년 대비해서는 아직도 높다고 판단.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추가 강제로 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

환율의 수준보다는 예측성이 중요.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할 수 있음
현재 환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으로 유지. 수입물가 증가율을 봤을 때 강제로 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는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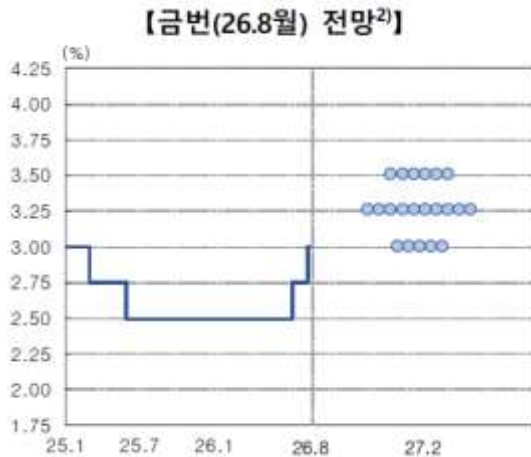
부동산가격

부동산가격을 잡는 것은 통화정책 만으로는 무리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두자리수로 유지.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금융시장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무게를 두었음

금융취약지수 IMF 직전(97년 2분기)을 기준으로 둔다면 현재 46.5.08년 금융위기 전은 76.5
앞으로 전개될 금융 스트레스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장기 평균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 깊은 우려감으로 보고 있음
금융 스트레스를 통한 실물경제의 여파가 크기 때문.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지수가 내려감. 신용증가율이나 레버리지 같은 지표들이 축소되는(위험선회채널을 통한) 경우가 있음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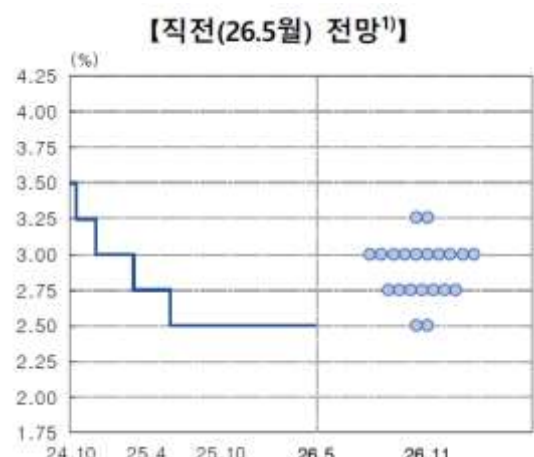
그림1. 26.8월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3.50% 6개, 3.25% 10개, 3.00%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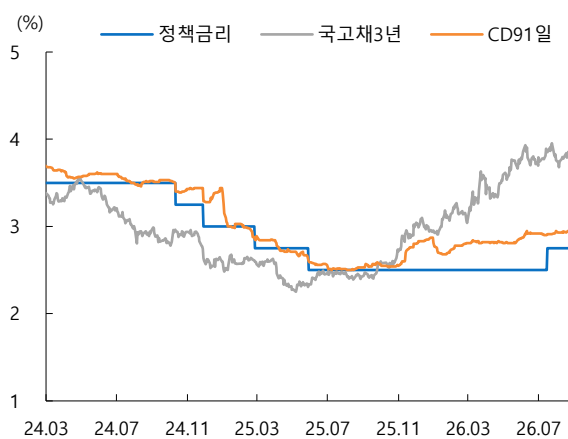
그림2. 26.5월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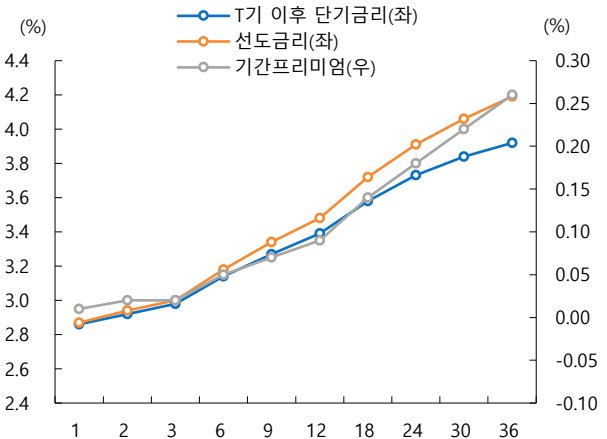
주: 3.25% 2개, 3.00% 10개, 2.75% 7개, 2.50% 2개

그림3. 한국 기준금리, CD91일 및 국고채 3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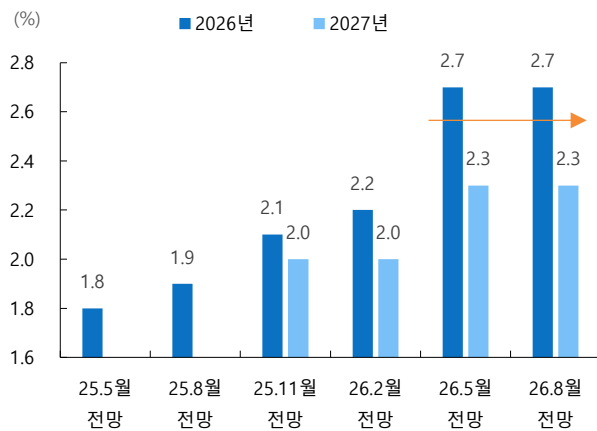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국고채 선도금리 현황(8/2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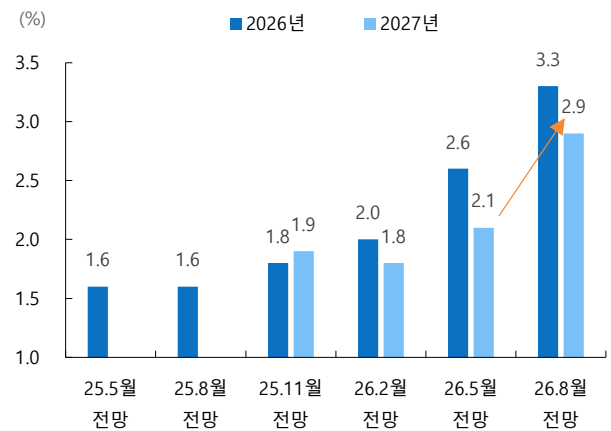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한국은행 물가 전망치 추이: 물가는 다행히 전망치 조정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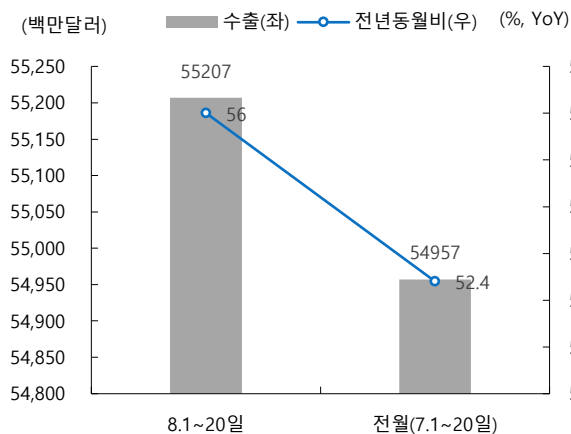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추이: 예견된 26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보다 27년 2.9%의 파급력 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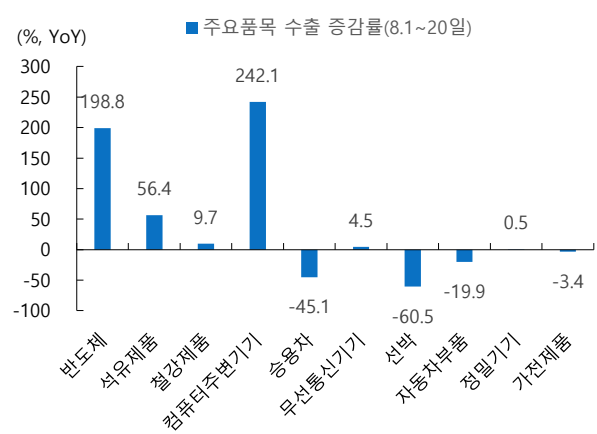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8.1~20일 수출 통계: 동기간(1~20일) 수출 8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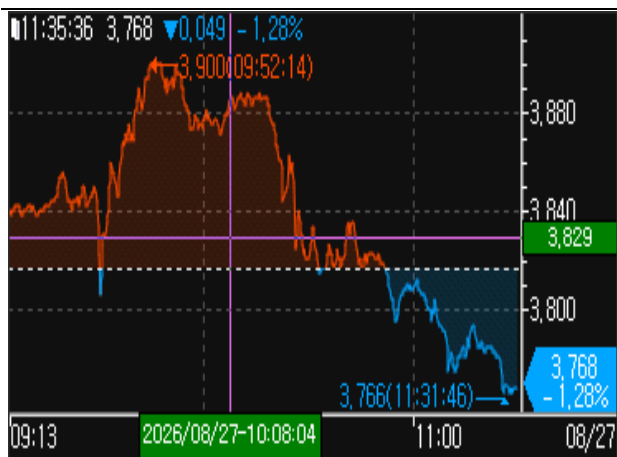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8.1~20일 주요 품목별 수출 통계: 반도체가 198.8%, 컴퓨터 주변기기가 242.1%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40억달러 흑자를 기록



자료: 관세청,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금동위(8/27) 장중 국고채 3년물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금동위(8/27) 장중 국고채 10년물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명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